

## 가족의 변화, 복지국가의 미래 (〈한국의 비공식복지〉, 사회평론아카데미, 손병돈(2021))

김진욱\*

사회복지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논의할 때 두 가지의 상이한 입장이 때에 따라 채택되곤 한다. 사회복지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보편적인 인간욕구 충족의 기제라는 입장이 하나이고, 근대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총체인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입장이 나머지 하나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조직 등을 통한 호혜와 상호부조의 전통은 복지국가가 탄생하기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인간 사회에 뿌리를 내려 왔다. 하지만 서구 복지국가에 비하여 국가복지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한국에서 이러한 자발적 민간 부문의 복지기능을 강조하기는 쉽지 않았다. 성장지상주의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제도적 유산을 뚫고 국가복지를 확장시켜 한국 '복지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암묵적 합의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우리 복지국가의 특수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민간복지의 과도한 의존이 광범위하게 지적되어 왔지만, 비공식복지라는 영역을 떼어 복지국가연구의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 학문적 노력은 부족했다. 그나마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의 '연(緣)복지와 평택대 손병돈 교수의 사적이전 연구들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 시도해 왔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사적이전과 빈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손병돈 교수의 새로운 학술서가 출간되었다. 2020년을 지나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기를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시도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비공식복지를 이론, 실태와 변화, 쟁점으로 나누어 세밀히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 수십 년간의 학문적 노력을 집대성한 손병돈 교수의 역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 사회복지의 유산: 비공식복지의 발달과 국가복지의 저발전

최근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국가복지의 저발전과 이를 대체해 온 기업복지와 비공식복지의 역할이었다. 이 책은 비공식부문을 다루고 있으니 기업복지는 논외로 하고, 국가복지의 저발전과 비공식복지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논의에 집중해보자. 필자가 이 책의 백미(白眉)로 꼽는 3장에서, 손교수는 비공식복지의 '성장'한 배경 또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서구와 달리 전통적 공동체가 유지된 채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족과 농촌에 남아 있던 가족 간의 경제적·기능적 유대가 유지될 수 있었다. 둘째, 개인과 가족의 이해가 동일시 되고 생존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한국 가족주의의 특성이다. 이는 전통적 효사상과 결부된 유교적 가족주의이자, 서구의 정서적 가족주의와 구분되는 도구적 가족주의이다. 셋째, 식민지 경험, 미군정,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대격변을 거치며 신뢰의 범위가 아는 사람으로 제약된 환경의 영향이다. 수공이 가는 설명들이다. 다만 3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족제도의 역사적 보편성에 대한 부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유교적 가족주의를 온전히 구성할 수 있었던 계층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인간의 수명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던 지배계급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와 함께 기초적인 공중보건과 위생 인프라가 확립된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 이후에야 일반 대중들이 자연수명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노부모, 성인 7~8남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함께 생존하며 전통적 대가족을 구성한 것은 아마도 일제 강점기 이후 '한때' 보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비공식복지 자체가 근대화의 산물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한편, 비공식복지의 발달과 병행되었던 '국가복지의 저성장'에 대한 설명 역시 3장의 핵심 논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두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가족 중심적 복지모델로 보수주의 가족사회학의 관점이다. 혈연간의 신뢰와 유교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기능은 한국에서 발전된 독특한 복지모델로서 서구 복지국가 모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복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제약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복지욕구를 일차적으로 비공식복지를 통해 충족해 왔고 또 이러한 가족우선주의가 사회복지제도의 면면에 녹아 있어서 국가복지의 성장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공식 연금망의 작동은 "연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곧 국가복지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p.94).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두 입장을 충실히 소개할 뿐 이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해석이나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손교수는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의 연륜과 학문적 역량을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 비공식복지의 실체에 다가가기

지난 25년간 가족의 복지기능, 특히 사적이전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실증연구를 주도해 왔던 저자의 내용은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증분석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 많은 내용들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존의 자료를 업데이트 한 것이라 해도, 비공식복지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한 흥미로운 분석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비공식복지는 그 규모와 범위가 여전히 클 뿐 아니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도 크다. 기초연금의 도입 이후 노후소득에서 국가복지의 몫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적이전을 구축(crowd-out)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사적이전의 기능과 성격을 변화시켜 왔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경향 외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논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여전히 크지만 소득 최하위계층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8장).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중하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p.266). 결국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복지의 확대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노인 인구의 성인 자녀 동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노인 빈곤률이 급격히 상승해왔다는 점이다(4장). 2000년 이전에는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그 비율이 1/4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비공식복지의 거대한 한 축을 차지했는데 이 기둥이 무너져 가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져 간 것이다. 향후 노인 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복지의 실체에 온전히 다가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공식복지의 두 축인 현금(cash)과 돌봄(care) 중에서 사적이전소득(현금)에 대한 분석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거’를 중심으로 가족의 생계공유와 돌봄에 대한 분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거나 다른 가구에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기능이 어떠한 변화를 그리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노인 및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여러 패널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돌봄기능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가족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점이다. 저자가 강변하듯 비공식복지 중에서도 일상적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가족이 거의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제목이 ‘비공식복지’라면 학연, 지연, 직장연 등 가족외의 다양한 연줄망 복지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가족의 복지기능 변화와 뗄 수 없는 인구·가구 구조 및 가치관의 변동을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가족에서 개인으로

코로나-19가 삶의 모습을 바꾼 지 만 2년이 되었다. 가족과 집단적 정체성을 대신한 개인주의화는 비대면의 일상화와 병행되며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감염병의 공포로 일상이 멈추며 취업난으로 이미 망가져 버린 청년세대의 결혼과 가족 형성의 현실은 더욱 엄혹해졌다. 2020년과 2021년의 극단적 저출산이 만성화된다면 20년 후 한국 사회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그 복지기능은 얼마나 지탱되고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구조의 충격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면, 가족해체의 가속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가족(가구) 중심의 복지체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가구 단위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를 마주한 바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가족 간의 만남마저 제한되면서, 따로 사는 가족의 돌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은 가족제도와 가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것이 필자가 서평을 제목을 ‘가족의 변화, 복지국가의 미래’라 한 까닭이다.